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경제안보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경제안보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美, 신행정부 행정명령 발표 동향
- 美-노르웨이 핵심광물 비시장 정책 · 관행 보고서 발간
- 中, 핵심광물 관련 수출통제 조치 발표
- 美,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발의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유지영 선임전문관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01

1. 美 신정부의 경제정책 발표 및 조치 시행 현황
2. 美 신정부 정책 동향에 대한 주요국 · 지역 반응
3. 경제안보 관점에서 美 정책 동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유아름 전문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15

1.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2. 그린란드의 경제안보적 가치
3. 향후 전망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안수린 전문관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22

* Charina Chou, James Manyika, Hartmut Neven. (2025). The Race to Lead the Quantum Future. Foreign Affairs.

1. 개요
2. 활용 분야 및 도전과제
3. 주요국 동향
4. 결론

별첨. 양자 컴퓨터 기본 참고자료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美, 신행정부 행정명령 발표 동향
- 美-노르웨이 핵심광물 비시장 정책 · 관행 보고서 발간
- 中, 핵심광물 관련 수출통제 조치 발표
- 美,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발의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선임전문관

요약

■ 美 신정부의 경제정책 발표 및 조치 시행 현황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무역 ▲에너지 ▲기술 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대통령 조치를 발표
- 공공 재정 지원 사업의 축소 의지 강조 및 민간 투자 기반의 혁신 사업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예고해오던 관세 조치의 공격적 활용 시작

■ 美 신정부 정책 동향에 대한 주요국·지역 반응

- 日, EU, 中 등 주요국·지역들은 관세, 에너지, 기술 정책 사안별로 협력·협상·보복 등 다양한 수단의 대응책을 구상하며 美 조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경제안보 관점에서 美 정책 동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전망

- 관세 조치가 美 양자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조치의 철회 요건이 불명확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 타결·종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 품목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 목표와 연계 및 상호관세는 양자 무역수지 적자 해소 목표와 연계되어 부과될 가능성
- 보편관세는 미국의 재정 수입 충당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의지가 관찰되며, 예외 적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
- 美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 미국의 금융 및 AI·정보 패권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美·中 대결 구도 심화 전망

■ 한국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 경제적 타격 최소화 및 대응 협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대응책 마련 중요
 - 관세, 美 보조금 축소, 기술 규제 등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에 알맞은 대비책 준비
- 한국의 경제안보에 도움이 되는 기회 모색의 과제 – 조선, 에너지, AI 등
 -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 이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안보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 발굴 및 모색 필요
- 장기적인 경제안보 과제에 대한 전략·협력 방향의 일관성 유지 중요
 -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MSP 등 공동의 경제안보 과제에 대한 동맹·파트너국 간 연대·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중요

1. 美 신정부의 경제정책 발표 및 조치 시행 현황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대통령 조치(행정명령·메모랜덤 등 포함)를 발표

● (무역정책) 美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메모랜덤(2025.1.20.)은 담당 부처들이 무역 조치 수단별 활용 가능성 및 준비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2025.4.1.까지 보고하도록 지시

- ▲관세 활용 검토 ▲무역협정 재협상 검토 ▲교역국 환율 정책 검토 ▲대외수입청 설립 타당성 조사 ▲301조·232조 및 각종 무역구제조치 활용 및 강화 검토 ▲수출통제·투자심사 및 ICT 공급망 규제 조치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각각 관련 부처가 검토 결과 보고 예정

● (에너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 등을 목표로 美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큰 변화를 예고한 다수의 조치를 발표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메모랜덤 5개 발표(2025.1.20.):

- ▲미국의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Unleashing American Energy)
-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 ▲알래스카 천연자원 활용(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 ▲풍력발전소 임대·허가 관행 검토(Temporary Withdrawal of All Wind Projects)
- ▲파리협약 탈퇴(Putting American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s)

- (생산) 각종 환경규제 철폐 등을 통해 세일오일·LNG 등의 탐사·시추·개발 적극 승인 전망 / 알래스카 석유·가스 시추 허가 행정명령 발표(2025.1.20.)에 따라 미국-캐나다 횡단 키스톤(Keystone) XL 송유관 건설 사업* 재개 가능성 제기(Pipeline & Gas Journal, 2025.2.1.) / 핵심광물 지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탐사·생산·가공 및 동맹국과의 공급망 강화 협력 의지 관찰

*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 문제를 이유로 2021년 승인을 취소했던 바 있음

- (수출) 동맹·협력국(EU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의 對러 의존도 경감을 위한 美LNG 수출 확대 의향

● (기술)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따른 미국의 혁신 촉진 및 對中 견제에 관한 정책은 세부 분야·사안별 접근이 상이

- (틱톡)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되었다가 무효화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틱톡강제 매각법을 통해 확실시되었던 틱톡 매각 조치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유예 지시*(2025.1.20.)

* 틱톡에 관한 미국의 규제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는 최용호·박지연(2024) 경제안보 Review 24-06호 참고

- 입법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의 유예 효력에 대한 법적 논의 예상 /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 사이에서 모순되게 추진되는 對中 정책에 대한 혼란 야기

- (AI·디지털 금융) 美 기술 리더십을 위한 규제 철폐·혁신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 AI 규제 철폐(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2025.1.20.)

▲ 디지털 금융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2025.1.23.)

■ 공공 재정 지원 사업의 축소 의지 및 민간 투자 기반의 혁신 사업 발표

●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지시의 행정명령을 발표(2025.1.27.) 후, 결국 취소

-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실질 이행을 위해 美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수천 개의 모든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메모랜덤을 발표하였으나, 관련하여 행정집행 유예 판결 / 결국 트럼프 행정부 OMB 메모 취소

● IRA·인프라법(IIJA)을 통해 지급되는 청정에너지 보조금의 경우에는 ‘미국의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자금 지출 즉시 중지(2025.1.20.)

-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수혜하고 있는 IRA 세액공제 등의 축소 여부는 지속 관찰 필요

● 반면, AI 스타게이트(Stargate)와 같은 대규모 민간주도 사업 발표(2025.1.21.)

-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 대표의 공동 자금 출자를 통해 최대 5,000억 달러의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등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 계획

• (데이터센터) 美 텍사스를 기점으로 미국 전역에 추가 인프라 건설 계획

• (반도체·SW) 인공일반지능·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의 학습·훈련에 필요한 컴퓨팅 능력 및 소프트웨어 협력을 위해 NVIDIA와 Microsoft 등이 스타게이트 사업에 참여중

• (전력) 초대형 AI 사업에 필요한 전력*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초소형 이동식 원자로 개발의 중요성 등이 연계하여 대두(Defense News, 2025.1.25.)

*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은 임산호(2025) 경제안보 Review 25-02호 참고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예고해오던 관세 조치의 공격적 활용 시작

● (콜롬비아) 미국의 불법이민자 송환에 대한 콜롬비아의 거부 의사로, 미국은 관세 조치 즉시 시행 및 추가 부과를 발표 / 결국 콜롬비아가 수용(2025.1.26.)

- 미국은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25% 관세 즉시 시행 및 1주일 내 50%로 상향, 비자 제한, 세관 검사 강화 및 금융제재 전면 시행 등을 발표

- 콜롬비아도 처음에는 25% 관세 맞불 조치를 예고했으나, 결국 송환 협력 합의

● (멕·加·中) 국경 수호 및 펜타닐 등 마약 척결을 목적으로 IEEPA 기반의 對멕시코·캐나다 25% 및 對중국 10% 관세 부과를 발표(2025.2.1.)

- 멕시코·캐나다가 마약 및 이민 단속을 위한 국경 강화에 합의하면서 미국은 2025.2.4. 시행 예정이었던 관세 조치를 한 달간 유예

- 對中 10% 관세는 유예 없이 시행함에 따라 중국은 각종 보복 패키지를 발표하며 맞불 전쟁 시작(2025.2.4.)
- (품목·상호) 품목별로는 반도체·철강·의약품·석유·가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2025.2.10.에 발표 (Reuters, 2025.2.11) /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상호 관세 부과 계획도 발표(Reuters, 2025.2.8.)

2. 美 신정부 정책 동향에 대한 주요국·지역 반응

■ 관세 조치

- (멕시코) 동맹·협력국 간 맞불 전쟁이 예고되던 차에 극적인 합의로 관세 전쟁 일시 중단
 - 캐나다는 USD 106.6B 상당의 와인·맥주·주방기기·스포츠용품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와 핵심광물 조달에 관한 비관세 장벽 조치 시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BBC, 2025.2.2.)
 - 멕시코 또한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보복 관세와 비관세 장벽 조치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음(BBC, 2025.2.2.)
- (중국) 유예되지 않은 對中 관세에 중국은 즉각적으로 보복 조치 발표하며 美-中 무역전쟁 시작
 - 중국은 對美 ▲석탄·석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10-15% 추가 관세 ▲텅스텐 등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구글 거냥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WTO 제소 등 전면적으로 준비된 반격에 돌입 (머니투데이, 2025.2.4.)
 - 중국 내 美·中 관계 전문가인 인민대 다오다밍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해 일찌감치 대응 전략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끼리의 긴밀한 협력이 향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국경제, 2025.2.4.)
 -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사악(vile)’하다며, 미국發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할 의지를 밝힘(연합뉴스, 2025.2.6.)
- (EU) 對EU 관세가 오래전부터 예고된 만큼(Politico, 2025.2.1.), EU는 협상안과 보복 대응 목록의 당근과 채찍을 선제적으로 준비(한국경제, 2025.2.5.)
 - 폰데라이언(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EU의 이익이 우선됨을 강조하면서도 EU가 미국과 힘든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강조(이투데이, 2025.2.5.)
 - 미국 LNG·비료·무기 수입과 對中 수출통제 협력 등의 협상안 구비
 - 다만, 미국이 부당한 관세 부과 시 反강압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활용해 서비스 부문에서의 대대적인 보복 예고(Financial Times, 2025.2.5.)

* EU의 ACI 관련해서는 유지영(2023) 경제안보 Review 23-14호 참고

- EU는 美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무효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 제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은행, 보험, 기타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나 시장접근을 막는 방법 등 방대한 부문에서의 보복 조치 시행 가능성을 시사
- 그린란드* 관련 미국의 對덴마크 강압 지속 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도 EU가 ACI를 활용할 가능성 제기
 - * 최근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Review 본 호(25-03호)의 유아름(2025)을 참고
- (대만) 대만 내 애플·NVIDIA 공급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기반의 기술 공급망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제기(Nikkei Asia, 2025.2.6.)
 - 미국이 對반도체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여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대만 정부는 미국으로 이전하고 싶은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까지 발표(Reuters 2025.2.3.)
- (일본) 日 농산물과 자동차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Nikkei Asia, 2025.2.9.)된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낙관적 태도 유지
 - 2025.2.7.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이시바 총리 간 회담 이후 NHK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자동차 생산자들이 얼마나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일본이 지난 5년간 최대 對美 투자국이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투자 공약도 제시했다고 발언 →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맞불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 유지(Reuters, 2025.2.9.)
 -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관세 조치 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가정 상황에 대한 답변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감(Reuters, 2025.2.9.)
 - 그 외에도 2025.2.9. 언론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제철*의 對美 투자 방향 관련 언급을 하였음을 밝혔고, ▲방위비 관련해서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지지 없이 증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Reuters, 2025.2.9.)
 - *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시도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국가안보의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으면서 현재 2025.6월까지 재협상 시한을 받은 상황.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도 ‘매각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나 ‘투자’는 가능하다는 답변(한겨레, 2025.2.10.)을 하여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의 수정 방향은 지속 주시 필요

■ 에너지 정책

- (일본) 일본은 미국發 무역전쟁 방지 및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대한 참여 등을 고려
 - 트럼프 대통령-이시바 총리 회담에서 일본은 미국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겠다고 약속 (조선일보, 2025.2.10.)
 - 내부적으로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경험했던 일본에게 호주산 에너지보다도 저렴한 미국산 LNG의 수입 확대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러시아 사할린 2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본 기업의 지분이 있는 점과 러시아산보다 미국산 LNG 운송에 훨씬 오랜 시간이 드는 점 등은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 있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Kyodo News, 2025.2.5.)

- 美 정부가 알래스카 석유 시추를 승인함에 따라 운송을 위해 필요해진 美-加 횡단 LNG 송유관 건설사업에 참여를 고려 중이나, 사업의 경제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논의의 진전을 계속 주시할 필요성(Reuters, 2025.2.1.)

● (EU)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협상안으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준비 완료

- EU 내 에너지 수요가 사실상 포화상태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경학적 안정성을 위해 EU는 미국산 LNG를 수입할 의향 확실히

- 다만, 세부적으로 각종 EU 청정에너지 정책(신규 메탄 규제, 환경기준 등) 요건에 화석연료의 사용이 부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한 이슈도 제기(Euractiv, 2025.1.27.)

- EU는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에 대한 위험을 경험한 만큼, 향후 대비 차원에서 미국산 LNG에도 적정 수준 이상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존재(Euractiv, 2025.1.27.)

● (멕시코)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에 전력 그리드, 전기버스, 철강(풍력터빈 제조용)을 수출하는 주요국으로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 폐지 및 美-中 무역전쟁이 야기할 對美 무역 축소 영향을 우려(Politico, 2025.2.5.)

■ 기술 혁신 및 규제 정책

● (일본) 소프트뱅크의 대대적인 對美 투자 등을 통해 美 AI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도권 확보 (The Japan Times, 2025.1.22.)

● (EU)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AI법 등을 통한 美 빅테크 규제 시행 의지 및 AI 관련 EU 내 이니셔티브 활성화 의향

- 트럼프 행정부가 AI 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는 만큼, EU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 경고(TechTarget, 2025.1.23.)를 하였으나, EU는 AI법 이행 가이드선 등을 예정대로 발표하며 규제 이행 의지에 있어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Financial Times, 2025.2.4.)

- 2025.2.10-11. 개최되는 AI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는 UAE와 공동으로 1GW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갖춘 초대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프랑스에 설립하기로 하는 기본 협정 발표(연합뉴스, 2025.2.7.)

● (중국) 중국은 2025년까지 글로벌 AI 시장 점유율 28% 달성을 추구하고 2030년까지 AI 업계 선두를 목표로 하는 AI 굴기의 현실화 기대

- 미국의 제재 하에서도 다수의 제2의 딥시크와 같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중국 AI 굴기의 성과로 몰려 등장할 것이 예고되는 상황(연합뉴스, 2025.2.6.)

- 미국의 對中 통제 강화 가능성에 따른 여러 우회 방안 및 기술적 장애요인 극복의 과제에 대해 고민(IT조선, 2025.2.7.)

3. 경제안보 관점에서 美 정책 동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전망

■ 관세 조치가 美 양자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조치의 철회 요건이 불명확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 타결·종결의 기준이 모호

- 마약 단속, 불법 이민자로부터의 국경 수호 등과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 단체나 인물 등을 표적화한 금융제재와 달리, 국가별 관세 조치를 지렛대 삼아 양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특이사항으로 관찰
 - 25% 관세는 경제적으로 美·加·멕 3국 모두에게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안전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 경제·외교·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Joshua P. Meltzer, 2025.2.3.)
 - 현재 발표된 멕시코·캐나다와의 양자 합의안 내용이 마약 및 불법이민 단속에 대한 제도 개선·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세 조치의 철회가 아닌 유예라는 점에서 美 조치 시행의 위협이 지속될 가능성
 - 마약 및 불법이민 단속의 해결이라는 목표치가 양자 협상에서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 또는 비현실적인 점은 조치대상국의 입장에서 끊임없는 협상의 과제가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존재(CSIS, 2025.2.3.)
 - 마약 및 불법이민 단속에 대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관세 조치가 부과된다면, 동맹·협력국의 對美 보복 의지가 강화되고 연대의 약화가 나타나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Navin Girishankar and Philip Luck, 2025.2.3.)
- 추후 EU 등 추가적인 국가들을 표적화한 관세 조치 또한 그 명분이 무엇으로 상정되는지에 따라 조치대상국의 협상 여지 및 미국과의 협상 전개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

■ 품목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 목표와 연계 및 상호관세는 양자 무역수지 적자 해소 목표와 연계되어 부과될 가능성

- (품목)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연설(2025.1.27.)에서 中 스타트업이 美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빗대어, 미국 산업 부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해외 생산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필요성 강조(Reuters, 2025.1.28.)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외국 생산자는 미국의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기에, 반도체·의약품·철강·석유 등 품목 기준으로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
 - ※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조치에 대한 예외·면제 요건 철회 및 25% 관세율 적용 서명. 2025.3.12. 발효 예정
 - 전문가들은 대만·한국·일본·인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반도체 제조국들에 영향을 줄 美 관세 조치가 다시 그 반도체 수입품을 활용해야 하는 美 기업들에게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Stephen Ezell, 2025.1.28.)

- 301조·232조·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품목별 표적화된 관세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旣마련된 미국의 조치 수단 방대 → 더 구체적인 방향은 2025.4.1. 발표될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검토 보고서의 결과 주시 필요

- (상호)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지명자는 베트남 등과 같이 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수하는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Reuters, 2025.2.7.)

- 미국은 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큰 국가들에게 다양한 압박 조치 및 상호관세 조치의 활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

※ 최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발의되었던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재발의 (Inside US Trade, 2025.1.28.)

※ 미국은 조만간 상호 관세 조치도 부과할 계획을 발표한 상황

■ 보편관세는 미국의 재정 수입 총당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의지가 관찰되며, 예외 적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

-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수석 고문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가 소득세를 대신하여 주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 (Washington Trade Daily, 2025.2.5.)

-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의 신설은 내국세를 통해 정부 재정 수입의 관리를 맡고 있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대응하는 역할을 의도

- 나바로는 소득세 도입 이전까지 관세가 미국 정부의 주 수입원이었던 19세기 당시 미국이 지금보다 부강했다고 설명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 지명자 또한 보편관세를 지지하며 조치 시행 시 예외 적용은 트럼프 1기보다 간소화되고 더욱 표적화 될 것이라고 전망(Inside US Trade, 2025.1.29.)

- 특히 보편관세의 역할이 조세 감축에 따른 재정 수입원의 총당이라는 내부요인과의 연관성이 크다면, 보편관세에 대한 예외 적용 및 국가별 협상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

- 전문가들은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한다는 발상은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세기로 회귀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Kimberly Clausing and Maurice Obstfeld, 2024.6.20.)

- 고율 관세는 거시경제적 불균형, 수출 감소, 경제성장 둔화, 높은 물가 상승을 야기 / 1913년 美 16차 헌법 개정으로 관세 대신 소득세에 기반한 공공재정 모델이 도입된 배경과 그 이후 미국이 누린 경제성장의 효과를 상기할 필요성 강조

■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 美 신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국내 물가 상승은 막고 ▲수출은 확대하고(무역수지 적자 완화), ▲적대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경감하는 등 美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전문가들은 美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AI 등 첨단기술 경쟁에 필요한 첨단 배터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등 장기적으로 美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Atlantic Council, 2025.1.22.)

- 이미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거대 에너지 기업들과 IRA 보조금을 받아 생산하는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에 의한 시장의 힘이 美 신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계획을 자동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도 존재(Nature, 2025.2.4.)

■ 미국의 금융 및 AI·정보 패권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美-中 대결 구도 심화 전망

- Farrell and Newman(2019)이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은 금융 및 정보(AI) 네트워크에 대한 美-中 패권 경쟁이 전면적으로 가시화 되는 양상

- **(금융)** 트럼프 대통령은 中-러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겨냥하여, BRICS 국가들에게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고(연합뉴스, 2025.1.31.)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한 달러를 선호하지만, 달러 패권 자체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 필요시 100% 징벌 관세 부과 언급

※ 중국은 10년 전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BRICS(러시아·중국·브라질·인도·남아공·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 내에서는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달러의 대안을 찾자는 주장이 제기

- 디지털 금융기술(암호화폐 등)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2025.1.23.) 또한 확장된 금융 패권 전장(戰場)에서의 경쟁국 견제 의도로 관찰

- **(정보·AI)** 美 중심의 AI 혁신 촉진 네트워크 구상 사업(AI 스타게이트) 추진과 동시에 경쟁국 견제 방안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

- (딥시크) 스타게이트 사업 발표 며칠 만에 중국의 딥시크(DeepSeek)가 공개(2025.1.27.)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더 이상 미국이 AI 패권에 독보적인 우위가 없다며, 중국의 AI 경쟁력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 및 우려를 제기(Financial Times, 2025.1.28.)

- 미국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스타게이트 사업에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협력사 발굴 및 참여를 유인하는 노력 진행 중(매일신문, 2025.2.4.)

- 동시에, 딥시크 견제를 위해 백악관은 AI 기업들에게 딥시크의 무단 데이터 수집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추가적인 AI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시행 여부를 고민 중(Reuters, 2025.2.1.)

4. 한국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 경제적 타격 최소화 및 대응 협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대응책 마련 중요

- **(관세)** 한국 또한 미국發 관세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對美 협상안 마련 노력에 최선

- 이미 트럼프 1기 당시 232조 조사 개시를 통해 관세 부과의 위협이 드러났던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LNG 등의 수입을 포함한 협상안 마련에 주력

- 방위비 협상 등 기타 美 관점의 안보 이슈들과 연계한 관세 부과가 제기 시, 관련 협상의 타결 기준을 명확히 확보하여 협상 종결의 연속적인 지연 가능성을 방지

● **(美 보조금 축소)** 미국의 친환경 정책 전환 및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 축소 가능성에 따른 여파 대비 필요

- 세액공제 폐지 등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등의 단기 수요 감소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생산 계획 대책 필요

- 한국 기업들의 對美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기하고, 필요한 對美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 간 민관 소통 및 협력을 강화

● **(기술규제)** EU를 비롯한 한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의 지적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대응 방안의 모색 필요

■ 한국의 경제안보에 도움이 되는 기회 모색의 과제 - 조선, 에너지, AI 등

●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 이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안보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 기회 발굴 및 모색의 중요성

- **(조선)** 미국의 해군력 강화·해운 네트워크 정비·선박 제조 공급망 강화 등을 총망라하는 해양 전략*에 발맞춰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되, 협력 요건들이 갖는 한국의 중·장기적 경제안보 여파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

* 美 해양 전략 및 조선업 지원에 관한 최신 발의안의 분석 내용은 최용호(2025) 경제안보 Review 25-01호 참고

- **(에너지)** 美-加 횡단 LNG 터미널 건설 사업 등에 아시아 지역 내 美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수요에 대해 일본이 세부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 및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 후 현실성 있는 파트너십 모색 필요 / 원전 관련 韓-美 공동 수주 사업 등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며 근본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도모

- **(AI)** 글로벌 AI 혁신 공급망·네트워크에서 특히 조임목(chokepoint)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한국 기업들이 선점할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 / 동시에, 한국 내 AI 관련 역내 핵심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 구축 및 확보로 국내 첨단 제조산업 등의 부흥 노력과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

■ 장기적인 경제안보 과제에 대한 전략·협력 방향성의 일관성 유지 중요

● 틱톡 금지에 대한 입장 변화나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 부과 계획 등에서와 같이 특정 정책 관련 美 신정부의 단기적 非일관성·모순이 관찰

-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안에 대한 단기적 대응에만 매몰되지 않고, 美 정책 흐름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 필요
- 공동의 경제안보 과제에 대한 동맹·파트너국 간 연대·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유지 노력 중요
 - 일례로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과제에서 韓·美·日·EU 등과 여러 광물부국 간의 협력 진전을 위한 동력 및 성과 창출 노력 유지

참고문헌

- 고일환. (2025.1.31.). 트럼프 “달러 대체 노리면 100% 관세”...‘중러 주도’ 브릭스 경고. *연합뉴스*.
- 김은정. (2025.2.4.). 中 최고 미·중 관계 전문가가 바라본 ‘무역전쟁 2.0’. *한국경제*.
- 김정아. (2025.2.5.). EU, 트럼프 관세 위협에 선제 대응 전략. *한국경제*.
- 머니투데이. (2025.2.4.). 구글 때리고, 광물 묶고, 미국차 관세...중국 ‘준비된’ 반격 개시.
- 송진원. (2025.2.7.). 프랑스-UAE, 프랑스에 1GW급 AI 데이터센터 짓기로. *연합뉴스*.
- 이투데이. (2025.2.5.). EU 수장 “트럼프와 ‘힘든 협상’ 준비돼있다...우리 이익보호 최우선”.
- 정성조. (2025.2.6.). 中 “美 관세 관련국과 공동대응...먼저 무역분쟁 일으키진 않을 것”. *연합뉴스*.
- 정우태. (2025.2.4.). 스타게이트 한국 참여 급물살...삼성 역할 커진다. *매일신문*.
- 조상록. (2025.2.7.). 딥시크부터 화웨이까지...중국 AI의 역습. *IT조선*.
- 차병섭. (2025.2.6.). 제2의 딥시크가 몰려온다...중국 기업들 ‘AI 굴기’. *연합뉴스*.
- 홍석재. (2025.2.10.). 트럼프 “일본제철, US스틸 과반출자 허용 안돼”...매각 불가 못질. *한겨레*.
- Andy Bounds. (2025.2.5.). EU Prepares to Hit Big Tech in Retaliation for Donald Trump’s Tariffs. *Financial Times*.
- Atlantic Council. (2025.1.22.). Seven Questions (and Expert Answers) About Trump’s First Actions to Transform US Energy.
- Brian Dabbs, Carles Anchondo, Christa Marshall. (2025.2.5.) US-China Trade War Rattles Energy Sector. *Politico*.
- Cheng Ting-Fang and Lauly Li. (2025.2.6.). Apple and Nvidia Suppliers Grapple with Trump Tariff Uncertainty. *Nikkei Asia*.
- Courtney Albon. (2025.1.25.). Power Generation Challenges Could Overshadow Stargate AI Initiative. *Defense News*.
- CSIS. (2025.2.3.). Unpacking President Trump’s Tariffs Action, Events, Video on Demand. <https://csis.org/events/unpacking-president-trumps-tariffs-action>.
- David Lawder and Andrea Shalal. (2025.2.7.). Trump’s Trade Chief Nominee Greer Says Universal Tariff Needs More Study. *Reuters*.
- Financial Times. (2025.1.28.). DeepSeek Defies America’s AI Supremacy. Opinion.
- _____. (2025.2.4.). EU Pushes Ahead with Enforcing AI Act Despite Donald Trump Warnings.
- Henry Farrell and Abraham Newman. (2019).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4, No. 1, pp. 42-79.
- Inside US Trade. (2025.1.28.). House Republicans introduce ‘Reciprocal Trade Act’.
- _____. (2025.1.29.). Trump’s Commerce pick tells senators he favors across-the-board tariffs.
- Jarrett Renshaw and David Morgan. (2025.2.8.). Trump Says He Will Announce Reciprocal Tariffs on Many Countries Next Week. *Reuters*.

- Jasper Steinlein. (2025.1.27.). Europe Doesn't Need US Gas, But Might Buy It Anyway. *Euractiv*.
- Jessica Murphy, Will Grant & Michael Race. (2025.2.2.). China, Canada and Mexico Vow Swift Response to Trump Tariffs. *BBC*.
- Jeff Tollefson. (2025.2.4.). Drill, Baby, Drill? Trump Policies Will Hurt Climate – But US Green Transition is Under Way. *Nature*.
- Joshua P. Meltzer. (2025.2.3.). Trump's 25%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Will Be A Blow to All 3 Countries. Brookings *Institute*.
- Karen Freifeld. (2025.2.1.). US Looking into Whether DeepSeek Used Restricted AI Chips, Source Says. *Reuters*.
- Kimberly Clausing and Maurice Obstfeld. (2024). Can Trump Replace Income Taxes with Tariff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 Kyodo News. (2025.2.5.). Japan PM to Pledge More LNG Imports from US in Talks with Trump.
- Mackenzie Holland. (2025.1.23.). Trump Takes Issue with EU Actions Against U.S. Big Tech. *TechTarget*.
- Navin Girishankar and Philip Luck. (2025.2.3.). Tariffs Using Emergency Economic Powers Risk Undermining U.S. Economic Security.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 Pipeline & Gas Journal (2025.2.1.). Trump Puts Keystone XL Pipeline Back in Discussion, Though Revival Faces Developer Resistance.
- Reuters. (2025.1.28.). Trump Tariffs on Chips and Drugs Would Hit U.S. Allies in Asia.
- _____. (2025.2.3.). Taiwan to Help Companies Relocate to US Following Trump Tariffs.
- _____. (2025.2.6.). China Commerce Ministry Says US Tariffs 'Vile', 'Unilateralist'.
- _____. (2025.2.9.). Japan PM Ishiba, After Meeting Trump, Voices Optimism Over Averting Tariffs.
- Seb Starcevic and Giselle Ruhiyih Ewing. (2025.2.1.). Trump Vows to Launch Trade War on EU. *Politico*.
- Shunsuke Ushigome and Yohei Hirose. (2025.2.9.). Japan Faces Trump's Reciprocal Tariffs on Farm Goods and Autos. *Nikkei Asia*.
- Stephen Ezell. (2025.1.28.). Trump's Proposed Tariffs on Taiwanese Semiconductors Would Backfir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
- Steve Holland, David Lawder and Andrea Shalal (2025.2.11.) Trump Raises Tariffs on Aluminum, Steel Imports in Latest Trade War Salvo. *Reuters*.
- Tim Kelly, Ykiko Toyoda and John Geddie. (2025.2.1.). Japan Weighs Alaska LNG Pipeline Pledge to Win Trump's Favour. *Reuters*.
- Washington Trade Daily. (2025.2.5.). Navarro: Tariffs Instead of Taxes.
- Yukana Inoue. (2025.1.22.). SoftBank to Help Fund Lead Trump-backed Stargate AI Project, A \$500 Billion Venture. *The Japan Times*.

저자 소개

유지영 | jyoo25@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 “국제수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관점 변화와 국제통상체제의 과제” 「국제경제법연구」(2024), “글로벌 AI 경쟁과 디지털 통상규범의 의의”, 「KISDI AI Outlook」,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1), “Security Exceptions in the WTO System: Bridge or Bottle-neck for Trade and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16) 등이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전문관

1.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 트럼프 美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이유로 그린란드 매입을 발언(2024.12.23.)*,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경제·군사적 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그린란드 매입을 지속 시사

* “For purposes of National Security and Freedom throughout the World, the USA feels that the ownership and control of Greenland is an absolute necessity”(2024.12.23., Truth)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2025.1.20.)에서 그린란드 매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지속 시사 중

- 마크 루비오 美 국무장관, 그린란드 매입은 농담이 아니며(not a joke)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문제로 향후 북극항로 운송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 언급(2025.1.30.)

- J.D. 밴스 美 부통령,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언급(2025.2.2.)

-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그린란드 매입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도 동시에 사안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적극적인 대화 및 협력의지를 동시에 피력 중

- (그린란드) 에게데 그린란드 자치총리는 미국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의도에 반대를 피력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 확대 희망을 표명(2025.1.16.)

- (덴마크)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매각 의사는 없으나 관련된 군사와 경제 문제에 관한 비공개 협상에는 응하겠다는 입장 / EU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중*

*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숄츠 독일 총리, 마크롱 대통령, 뢰터 NATO 사무총장(2025.1.28.), 스타머 英 총리와 면담(2025.2.4.), EU 지도자들은 영토보존과 주권 존중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며 우려 입장 표명(2025.1.9.) ▲스타머 英 총리, 그린란드 안보 협력하기로 합의(2025.2.4.))

-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제기됐으나 ▲덴마크·그린란드의 강력한 반대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 ▲미국 내 정치적 지지 부족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논의 소강

-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을 주장했으나 ▲일방적인 국경 변경은 불가하다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반응과 국제법적 문제 ▲미국 내 정치적 반발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논의 소강*

* 그린란드의 가치는 약 1조 7,000억 달러(약 2,478조원)로 추정, 그린란드 매입 실현 시 막대한 매입비용은 미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그린란드는 석유 및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하며(희토류 세계 2위 매장량) 북극항로 이용시 물류운송 기간 단축이 가능해 경제·안보적 전략가치가 부상 → 그러나 부족한 인프라 및 낮은 경제성 등 한계요인도 존재
 - (핵심광물)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매장량 및 생산량 세계 1위로, 對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 및 서방에게 그린란드가 희토류 대체 공급지로 부상
 - (북극항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부상, 북극항로 이용시 서유럽에서 동아시아 까지 기존 수에즈운하를 이용할 때 보다 거리운항 일수 약 40% 단축 가능

2. 그린란드의 경제안보적 가치

- 그린란드는 덴마크 보호령으로 1979년부터 자치가 허용, 2009년부터 독립을 선언할 권리를 부여받아 외교·국방을 제외한 사법·경찰·입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중
 - 그린란드는 한반도 면적의 10배(216만km²), 영토의 80% 이상이 동토로 주민(약 5만 7천명) 90%가 이누이트 족, 어업과 관광업에 주력
 - 그린란드는 독립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 재정의 약 50%를 덴마크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여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
- 그린란드에는 희토류를 포함 니켈·코발트 등 희귀 금속과 석유 등 에너지 자원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기회)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의 약 9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 원료이자 청정에너지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그린란드의 경제안보적 가치가 상승
 - 희토류(남부, 중동부, 중서부), 흑연(중서부, 남부) 등 해안지역에 주요 자원 매장 약 6억톤이 넘는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
 - 탐사 및 개발은 초기 단계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있어 기존보다 낮은 비용과 기술로 광물 및 대규모 석유 매장량 발견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
 - Maaja Nathanielsen 그린란드 무역 및 원자재 장관은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이 지난 5년 사이에 증가했다고 언급
 - ※ 현재 그린란드 전역 100개 지역에 광물 탐사·채굴 허가가 내려졌으며 영국·캐나다·호주 광산회사가 가장 큰 외국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단 하나만 보유 중
 - (한계) ▲높은 채굴비용 ▲부족한 인프라 ▲예측불가능한 기후와 지형 ▲엄격한 환경규정 등으로 실질적 광물 개발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적·경제적·환경적 문제해결과 기반 인프라 구축(항만·도로·통신 등)이 선제 돼야 할 필요(김엄지 KMI, 2024 국회 북극항로 토론회)

- (규제) 현재 그린란드에 활성화된 광산은 단 두 곳이며 석유와 가스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추는 금지되어 있으며 심해 채굴도 배제
- (부족한 인프라) 적은 인구(노동력), 부족한 철도, 항만, 전기 등 인프라로 본격적인 광물 탐사 및 채굴, 생산 및 판매까지는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기후와 지형) 면적이 80%가 빙하로 덮여 있으며 광물 매장지와 정착지 사이 도로가 부재하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 변수도 존재해 높은 채굴 비용 발생

■ 그린란드는 미국과 유럽 사이인 북극항로의 중심에 위치,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로 기존 해상 항로의 한계가 노정*되자 북극항로가 대안으로 부상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희망봉으로 우회하며 물류비용 증가 등

● (기회) 북극항로 통제권을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우위 확보가 가능

- (안보) 그린란드는 덴마크 코펜하겐보다 미국 뉴욕에 더 가까우며, 미국과 러시아에 상대국의 잠재적 공격을 방어하고 북극해 진출을 막는 지정학적 요충지

※ 그린란드는 아이슬란드와 영국을 잇는 ‘GIUK갭’의 일부로 NATO가 냉전 시대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중추 역할을 함 / 미국은 그린란드 북부 툴레에 공군기지를 보유(現 피투픽 우주기지)

- (공급망/물류) 북극항로 이용 시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기존 동서항로(동아시아-서유럽)보다 거리운항 일수 약 40% 단축이 가능

※ 북극항로 이용 시 로테르담(네덜란드) 부산(대한민국) 거리운항 일수 29% 단축

[그림 1] 북극해역 국가별 경계와 북극항로



출처: 연합뉴스(2019), 조선일보(2025)

- (한계) ▲4개월로 한정된 운항 기간(7월~10월) ▲기항항만 등 물류 인프라 부족에 따른 낮은 경제성 ▲예측하기 힘든 북극 기후 및 빙하로 인한 높은 보험비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북극항로의 실질적 운영과 상업적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북극 내 환경규제 강화로 2024.7월부터 중질유 연료 사용 및 중질유 운송 금지

■ 미국은 과거부터 자원 및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그린란드 매입을 검토, 최근 미국 민간기업이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등 관심이 증가

- 미국은 1867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시절부터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인 위치를 고려해 그린란드 매입방안을 검토 → 1946년 해리 트루먼 미국 행정부는 소련 견제를 위해 전략·군사적 이유로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덴마크 정부의 거부로 실패 →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그린란드 매입방안 검토를 지시

- 최근 미국 민간기업의 그린란드 개발 투자 및 미국 정부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 증가

- (자원개발) 미국은 주요 원자재 수급의 최대 60%를 중국에 의존, 특히 미국 내 주요 희토류 자석 생산회사는 단 한 곳으로 중국을 대체할 희토류 공급지를 모색 중이며 최근 美 민간기업의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 사업 참여가 증가

※ (미국 민간기업의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 투자) 美 AI 광물탐사 기업인 코볼드 메탈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사모펀드 칼라일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창업자 등의 투자를 받아 (약 1억 9,250만 달러 / 약 2,512억원) 그린란드에서 사업을 진행 중

- (안보) ▲그린란드 북쪽 툴레에 공군기지(現 피투픽 우주기지)를 보유 ▲그린란드에 총영사관 설치(2020년) ▲블링큰 국무장관이 방문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원조 계획을 발표(2022년)

■ 한편, 중국은 자원확보와 북극해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린란드에 진출 의지 및 투자를 진행 중이나 미국은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을 견제하는 중

- 중국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북극 실크로드* 개척과 자원확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유용한 협력 파트너로 간주(Ties Dams 외, 2020.6.4.)

* 2018년 북극전략백서를 통해 스스로 북극주변국가(near-Artic state)로 선언

- (목표) ▲북극항로를 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연결해 아시아-유럽 간 새로운 물류 허브 구축 ▲희토류, 우라늄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경제적·전략적 입지 확대

- (진출 현황) 중국은 2012년-2017년 동안 그린란드 GDP의 12%에 해당하는 20억 달러를 그린란드에 투자해 광산 인수, 위성 기지국 건설 등을 추진

- 미국은 중국의 그린란드 진출을 견제, 중국의 그린란드 내 사업시도에 제동

- 2018년 그린란드의 신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기업들(중국교통건설 등) 입찰 → 미국이 중국기업의 공항 건설 참여를 반대하며 덴마크에 압박 → 동 공항은 덴마크 기업이 건설하기로 최종결정

- 로이터는 최근 미국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남부에서 희토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호주 광산기업(Tanbreez)에게 자사 지분을 중국 구매자에게 매각하지 말라고 로비했다고 보도 (Reuters, 2025.1.9.)

3.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2019년처럼 레토릭(rhetoric)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군사적 개입은 실현가능성이 적으나 경제적 제재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존재
 - BBC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 소멸 ▲ 그린란드 독립투표 및 對미국 협력 강화 추진 ▲ 미국의 對덴마크 경제적 압박 강화 ▲ 군사력 사용(BBC, 2025.1.27.)
 - 상기 시나리오 중 그린란드 독립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덴 정부의 보조금이 사라진 이후 그린란드 경제와 복지 시스템을 계속 유지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이 관건이며, 군사력 사용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
 -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과거에는 국내 이슈에 집중했다면 금번 발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외적으로 팽창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Doug Bandow, 2025.1.8.)
 - Elon Musk의 측근인 Ken Howery(paypal 공동창업)가 덴마크 주재 대사로 내정된 점은 트럼프측이 그린란드의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방증(Fagen Nyheter紙 스웨덴 일간지 정치평론가)
 - 그린란드가 북극 및 대서양 안보경제에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그린란드에 대한 러시아·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미국 기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존재(스웨덴국제문제연구소 Jan Hallenberg)
- 2019년 매입 시도와 비교 시, 美 국내 반발이 적으며 대외적으로 중·러에 대응한다는 대의명분을 갖춘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그린란드 매입을 지속 제기할 가능성 존재해 향후 구체적인 매입 행보를 주시할 필요
 - 美 하원에서 美 대통령에게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 법안*을 추진 중
 - * Make Greenland great again Act / H.R. 361, To authorize the President to seek t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Kingdom of Denmark to secure the acquisition of Greenland by the United States(2025.1.13.)
 - 한편,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 언급 이후 시행된 2025년 여론조사에서 그린란드 주민의 85%가 미국에 병합되길 원치 않는다고 응답(덴마크 일간지 Verlingske 여론조사, 2025.1.27.), 그린란드 정부는 당초 4월 예정이던 총선을 3월 11일로 앞당겨 변경

참고문헌

- 김동현. (2024.11.18). 트럼프 2기 내각은 ‘부통령 후보 내각’?... 벌써 5명 주요직책 내정. *연합뉴스*.
- 김서영. (2019.8.22.). 트럼프, 왜 그린란드 집착하나... ‘북극패권 잡고 국내 이슈 분산’. *연합뉴스*.
- 김지연. (2024.2.5.). 덴마크 총리 ‘영국과 그린란드 안보 협력하기로’. *연합뉴스*.
- 류재민. (2025.1.9.). 히토류만이 아니었다...트럼프 ‘빙하 녹는 그린란드’ 노리는 이유. *조선일보*.
- 장윤미. (2023.12.11.). 글로벌 이슈: 북극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KIRI 리포트*.
- 정미하. (2025.1.10.). 트럼프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눈독 들이는 이유. *조선비즈*.
- 정빛나. (2025.1.16.). 덴마크 총리, ‘그린란드 눈독’ 트럼프에 ‘북극 안보 기여할 것’. *연합뉴스*.
- 정시행. (2023.12.1.). 그린란드 동토 녹자... 억만장자들 히토류 확보 나섰다. *조선일보*.
- 조찬제. (2019.9.21.).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의도 궁금?... 폼페이오에게 물어봐. *경향신문*.
- 조형연. (2013.4.23.). 북극항로를 가다: 북극해의 자원과 영유권 분쟁. *강원도민일보*.
- 지승현. (2024.12.11.). 북극항로 관심 재집중... 준비할 것은?: 2024 국회 북극항로 토론회. *현대해양*.
- 이용인. (2022.1.6.). 미국은 규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 *한겨레*.
- 이종혜. (2025.1.10.). 트럼프 공세에 침묵하다... EU 지도부, 뒤늦게 ‘우려’. *문화일보*.
- 홍지영. (2019.9.11.). 주간인사이드: 그린란드가 중에 공항 건설 요청하자 美 매티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저지 - 트럼프 ‘그린란드 사고 싶다’ 발언 배경에 中 자본의 북극 진출이 있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
- 서울신문. (2025.1.12.). 그린란드 이어 스발바르... 미러 북극 패권 경쟁에 휘말리나. *서울신문*.
- 통상뉴스. (2025.1.21.). 中, 美 中 무역분쟁서 히토류 무기화... 미, 대중국 의존 탈피 시간 걸릴 듯.
- Adrienne Murray. (2025.1.27.). Inside the race for Greenland’s mineral wealth. *BBC*.
- BBC. (2025.1.9.). 트럼프가 파나마, 그린란드, 캐나다를 위협하는 이유는?.
- Doug Bandow. (2025.1.8.). Donald Trump’s Dream: Taking over Panama, Canada and Greenland is nonsense. *CATO Institute*.
- Laura Gozzi and Robert Greenall. (2025.1.25.). Trump wants to take Greenland: Four ways this saga could go. *BBC*.
- Mark Leonard. (2025.2.7.). A cold front: Denmark’s response to Trump’s desire for Greenland.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Paak Sigurd Hilde. (2023.1.21.). 북극해 항로: 산업과 안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 Reuters. (2025.1.9.). US lobbied Greenland rare earths developer Tanbreez not to sell to China.
- Reuters. (2025.1.29.). Poll: 85% of Greenlanders do not want to be part of the US
- Reuters. (2024.12.23.). Greenland is not for sale, its leader says in response to Trump
- Ties Dams, Louise van Schaik, Adaja Stoetman. (2020.6.4.). China’s arctic strategy in Iceland and Greenland: Presence before power. *Clingendael*.
- Voice of America. (2025.1.30.). 루비오 美 국무장관 ‘그린란드 매입 농담 아냐’.

저자 소개

유아름 | aryoo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기술패권 경쟁, 디지털·AI 규범, 디지털 통상, 빅데이터 분석, 에너지, 중동 정치경제이다. 주요 연구로는 「주요국(美·EU·中·日)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경제안보리뷰 24-1호(2024), 「한국-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리뷰 24-12호(2024), 「클라우드 산업과 경제안보: 데이터안보와 기술통제」 경제안보리뷰 24-16호(2024) 등이 있다.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전문관

■ Charina CHOU(구글 퀀텀 AI 최고운영관리자), James MANYIKA(구글 연구·기술 및 사회 담당 수석 부사장), Hartmut NEVEN(구글 퀀텀 AI (공동)창립자)는 최근 The Race to Lead the Quantum Future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비공식 번역)”) Foreign Affairs에 기고(2025.1.7.)한 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 (주요 내용) ▲양자(퀀텀)과학기술 특성 ▲양자 활용 분야(기회) 및 도전과제(위기) ▲주요국 양자기술 협력 또는 경쟁 현황 ▲퀀텀 도약 사전준비 등

※ 양자역학의 탄생 100주년 기념 유엔은 2025년을 ‘국제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

1. 개요

■ 구글 퀀텀社, 양자 컴퓨팅 칩인 ‘윌로우(Willow)’ 개발 소식(24.12.10.)을 전하며, 양자 컴퓨팅 기술 선두 및 양자 기술에 대한美中 패권경쟁 본격화 예고

- 동社は 윌로우 칩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10.7조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다*며 퀀텀 상용화 시점을 앞당겼다고 언급

* 큐비트(양자컴 최소 단위)가 늘어날수록 계산능력도 배가 되지만, 오류 또한 쉽게 발생하는데 양자오류 수정기술을 활용해 오류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 美IBM社 현존 최고 성능 양자 프로세서(Heron) 공개(2024.11.11.) 및 MS社 아톰 컴퓨팅과 협력해 24개 논리 큐비트로 구성된 양자 컴퓨터 구현(2024.11.19.) 등 퀀텀 시대 도래 근접

- 윌로우 칩 공개 일주일 만에 중국과학원은 새로운 양자칩(‘주총즈 3.0’)을 사전논문 사이트 아카이브에 공개하며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양자 분야로 확산 신호

- 여전히 초기 단계지만 양자과학기술(Quantum Science & Technology)*이 향후 수십 년간 국가 안보와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그림 1> 참조)

* 나노미터 수준(전자, 원자 등)의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물리적 특성(중첩, 얽힘 등)을 정보과학기술에 적용한 기술로 ▲퀀텀 컴퓨팅 ▲퀀텀 통신(네트워크) ▲퀀텀 센싱 등으로 구분

2. 활용 분야 및 도전과제

■ 양자 컴퓨터는 화학 시뮬레이션(신약 개발 및 질병 퇴치 등 생명공학), 암호학*, 머신러닝 등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 다대 / 특히 반도체 집적화(‘무어의 법칙’)의 한계를 양자과학기술로 극복 가능

● 반면 권텀은 기존 보안체계(전자서명, 금융거래 등)을 무력화*시키고, 화학무기 모의실험, 비행궤도 최적화 등 군사 목적 활용시 국가안보에도 위협

* 현재 보안체계는 양자 컴퓨터의 특기인 소인수분해를 활용한 공개키 암호화(RSA)를 사용하는 바, 뚫는 자(양자 컴퓨터)와 막는 자(양자암호통신)의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암시

- (양자 컴퓨팅의) 뛰어난 계산 능력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 도난 ▲금융시스템 마비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등 악의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상존

※ 우리 정부의 ‘권텀 이니셔티브(2024.4.)’에 따르면, 상용화 시점은 양자 산업 분야별(권텀 통신 4~6년, 권텀 센싱 7~9년, 권텀 컴퓨터 10~14년)로 상이

<그림 1> 양자 특성 및 양자과학기술 활용분야



출처 : 과기정통부 「권텀 이니셔티브」 (2024.4.25)

3. 주요국 동향

■ 주요국(美·EU·英·中 등)들은 2010년대 후반부터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싱 등 양자과학기술 분야 주도권 경쟁 본격화

- (미국) ‘국가 권텀 이니셔티브(NQI)’ 발표(2018년)하면서 5조 원 규모의 투자 추진, 일본과 양자 협력각서 체결(2019년, 2023년 확대), 美 주도 양자 다자협의체(‘2N vs 2N’) 추진(2022.5.), ‘권텀개발그룹’ 설립(2024년) 등

※ ‘권텀개발그룹’은 美 주도 下 13개국*이 참여하는 양자과학기술의 발전과 규제,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로, 권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조성 촉진과 기술 보호를 위해 2024년 7월에 출범

* 기존 9개국(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덴마크, 핀란드) + 신규 4개국(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추가

- AUKUS, Quad, 美-EU 무역기술위원회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권텀 관련 연구, 기술, 표준 등 논의 등 권텀 기술 우위 선점 노력 경주
- 동시에 여타 동맹국과 함께 양자 기술 및 관련 제품에 대한 對中 수출통제 및 규제 강화(<표 2> 참조)

- (EU) 양자 대표기구인 권텀 플래그십을 필두로 양자 기술 분야에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약 10억 유로(약 1조3,100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
- (영국) ‘국가 양자 전략(2023년 수립)’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약 4조원 투자 진행중
- (일본) 2020년 양자이노베이션전략, 2022년 양자미래사회비전을 발표하며 권텀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관련 연구 지속 추진중
- (중국) 2016년 양자기술 개발을 국가 우선순위로 지정 및 세계 최초의 양자 통신위성 ‘묵자호’ 발사/ 2018년 이후 5년간 1,000억 위안(약 17조원) 투입 / 2024년 12월 양자컴퓨팅 및 데이터 기반 의료 연구기관 설립 등

■ 美 정부, 러시아·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가들의 양자컴퓨팅 개발에 주목하며, 우방국들에 권텀 관련 장비 對러 수출통제 요청 및 중국內 권텀 개발 대학교 연구소 등을 수출제한명단 (Entity List)에 등재하는 등 기술보호 노력

<표 2> 주요국 양자기술 통제 동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텀 정보 및 권텀 센싱 기술 상거래 통제 목록 포함(2018.11월) ● 권텀 컴퓨팅 기술 관련 8개 중국기업 수출 금지(2021.11월) ● 바이든 대통령, 中 권텀 컴퓨터 분야 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 발표(2023.8월) ● 첨단기술(양자컴퓨팅 등) 수출통제 조치 발표(2024.9월)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집행위, 양자과학기술 등 군사 목적 4대 기술의 위험성 평가 수행 및 수출통제 방안 검토 추진(2023년 10월) ● 양자기술 포함 민감·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 검토 강화, 회원국 간 수출통제 조율, 민군 겸용 기술 연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전략 패키지 채택(2024.1월)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투자법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17개 분야(양자과학기술 포함)에 대해 외국인이 해당 기업·자산을 인수할 경우 신고·심사 체계 수립(2021.4월) ● 신기술(34큐비트 이상 권텀 컴퓨터 등 포함)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2024.4월)

출처 : 과기정통부 「권텀 이니셔티브」 (2024.4.25)

4. 결론

- 저자들은 **퀀텀 기술·연구 관련 국별 주력산업이 상이한 점 감안, 주요국 간 협력 증진 및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망 구축 필요성 강조**
 - **대만(TSMC)**은 양자컴퓨터 제조와 유사한 고급 반도체 제조시설, **영국과 EU**는 양자컴퓨터를 구현할 극저온 냉장고 전문지식, **이스라엘과 일본**은 제어 전자 장치 및 배선 등 구성요소에 강점 보유
 - 아울러, 산·학·연·관이 협력해 양자 컴퓨팅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윤리적·법적 이슈를 감안한 국제적 기준 마련 등의 노력 제안

별첨 양자 컴퓨터 기본 참고자료

개념	<p>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er)는 양자역학(중첩, 얽힘 등)적인 현상을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계산 기계이고, 그러한 방법을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으로 표현 ※ 양자(量子) :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의 에너지를 의미</p>	
양자 특성		
중첩 (superposition)	“0”과 “1”에 해당하는 상태를 동시에 가짐 (ex. 동전 회전 상태로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	
얽힘 (entanglement)	한쪽 상태값이 바뀌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다른 쪽 양자 상태값도 동시에 변동	
기존 컴퓨터 vs 양자 컴퓨터 차이		
데이터 처리 단위	비트(Bit, 0과 1)	큐비트(Qubit) / 큐비트 많을수록 양자컴 계산능력 ↑
데이터 처리 방식	순차적 연산	동시다발적 연산(중첩)
강점	단순 작업 및 일반 연산	복잡한 연산 및 최적화 문제 해결(얽힘)
한계	복잡한 계산 속도 저하	양자역학 근본 성질로 인해 난수 계산에서 발생하는 오류 ※ 큐비트에 입력된 정보는 외부 환경과 조작의 영향을 쉽게 받아 연산 규모나 컴퓨팅 규모가 커지면 오류도 증가
양자컴퓨팅 플랫폼(큐비트 주요 재료)		주요 기업
초전도 (Superconducting)	초전도 물질로 회로를 그려 만드는 방식	구글, IBM, 리게티 컴퓨팅, 마이크로소프트
이온트랩 (Trapped Ions)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하여 이온 상태로 만든 후 개별 이온을 큐비트로 사용하는 방식	아이온큐, AQT, Quantum
중성원자 (Neutral Atoms)	전기적 중성 상태의 원자를 광 집계(레이저 핀셋)로 포획하여 큐비트로 사용하는 방식	아톰 컴퓨팅, QuEra Computing Inc.
광자 (Photonics)	빛 입자인 광자를 이용하여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	PsiQuantum, Quix

출처: 저자 종합 정리

저자 소개

안수린 | srann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 미중 기술 경쟁, 신형안보기술, 수출통제, 경제제재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의 대북제재 I & II편,” “미국 상무부의 (AI)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통제,” “미국의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위협 인식,” “미국의 수출통제 효과성 및 역효과” 등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1.15.~2025.2.5.)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트럼프 취임 당일 대통령 조치(presidential action) 발표(1.20) / 총 46건 (행정명령 26건, 메모 12건, 포고령·안건 각각 4건 등)

- 그 중 경제안보 관련 주요 조치는 10건으로 파악

구분	경제안보 관련 주요 대통령 조치
대외기조	① 美 국무부의 미 우선주의 정책(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
물가·재정·통상	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탈퇴 선언(The OECD Global Tax Deal) ②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③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Delivering Emergency Price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d Defeating the Cost-of-Living Crisis)
에너지	① 미국의 에너지 활용 확대(Unleashing American Energy) - 연방정부 토지·해역·대륙붕에서의 에너지 생산 확대, 관련 규제 폐지 검토, 희토류 등 핵심광물 국내외 채굴·제련 강화, 전기차 의무화 등 그린뉴딜 정책 철회 ②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선언(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 에너지 자원의 탐사·생산·수송·정제·발전 등을 위한 합법적 비상 권한 적극 행사 ③ 알래스카 천연자원 활용(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 알래스카의 LNG 생산을 극대화하고, 미국 및 여타 태평양 동맹국에 판매 ④ 풍력발전소 임대·허가 관행 검토(Temporary Withdrawal of All Wind Projects) -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갱신, 허가, 임대 및 대출 금지 ⑤ 파리협정 탈퇴(Putting American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s) - 유엔 기후변화협약 下, 모든 협정·합의 및 공약(재정적 의무 등) 즉시 탈퇴·철회
기술·데이터	① 틱톡금지법 시행 75일 연기(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 **美 상무부·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핵심광물 부문 비시장 정책 및 관행 관련 보고서* 발간 (1.14)**

*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Critical Minerals Sector / '23년 미국의 5대 핵심광물(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수입국은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남아공, 중국 順

- 중국의 비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여, 품질, 투명성, ESG 기준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 강조

■ **中 정부, 5대 광물·금속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발표 (2.4)**

- (주요 내용)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스, 몰리브덴, 인듐 관련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실시(2.4. 시행)

- 해당 품목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 / 수출업자는 통제 품목 수출시 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취득 필요

- (평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 조치로 관찰되는바, 중국 정부의 실질 집행 여부 및 추가 조치 동향에 대한 지속 관찰 필요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2.4. 시행)

- 수출통제 품목 전환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 관리* 강화 가능성 불배제 /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 국무원은 이중용도물품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에 대해 리스크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관리

■ **美 공화당 의원들*,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발의 (1.24)**

* Riley Moore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 및 8명 공화당 의원 공동 발의

- 대통령에게 타국과의 협상을 통해 타국이 부과한 관세 또는 타국이 부과한 비관세 장벽의 유효 관세율에 상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 부여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발의된 상호무역법안(the U.S. Reciprocal Trade Act)*과 기본 내용은 유사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위협과 맥을 같이하는 의회의 인식** 반영

* '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Sean Duffy(공화/위스콘신) 前 하원의원(現 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이 품목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무역법 발의

** ▲유럽의 對美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약화, ▲캐·멕은 펜타닐, 불법이민자의 미국 유입 허용, ▲중국에 대한 최혜국 무역 지위 부여는 미국의 안보 이익 훼손 등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1.14.	[제재] 상무부, 대만 지역 무기 판매에 관여한 美 기업 7개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Unreliable Entity List)에 포함 * ▲ Inter-Coaster Electronics ▲ System Studies & Simulation ▲ IronMountain Solutions 등
	1.15.	[제재] 상무부 대변인, 최근 美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무역제한조치 관련 강력 불만 및 반대 입장 표명
	1.17.	[수출] 2024년 한국 對중국 수출, 전년 대비 6.6% 증가한 1,330억 달러로 2021년 이후 3년만 증가세 전환
	1.17.	[AI] 국가인공지능산업투자펀드 설립: 초기 자본금 600억 위안(약 11조 9000억원)
	1.18.	[희토류] 지질조사국, 중국 남부 윈난성 지역 1백만 톤 이상의 희토류 매장지 발견 :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영구자석 핵심소재 47만톤 이상 포함 추정
	1.22.	[요소] 2024년 中 요소 수출량, 261,800톤으로 2023년(4,254,300톤)의 6% 불과 : 對韓 수출량 87,300톤으로 전체 수출국 중 가장 많은 수출량 차지(33.3%)
	2.4.	[관세] WTO에 미국 관세조치 제소
	2.4.	[제재] 상무부, 美 기업 2개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 * PVH그룹(Philips-Van-Heusen) 및 일루미나(Illumina, Inc.)
	2.4.	[수출통제] 상무부 · 해관총서, 5대 광물·금속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발표 :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
	2.4.	[관세]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 부과 발표 : 미국산 석탄 · LNG에 15%,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농기계, 배기량이 큰 자동차와 픽업 트럭 등 총 72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 부과 예정(2.10~)
미국	1.14.	[강제노동]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제재 목록에 ▲ 광업 ▲ 섬유 ▲ 태양광 등 관련 37개 中 기업 추가 : 강제 노동 연관 中 기업 제품 수입 금지
	1.14.	[광물] 미국 상무부-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중국의 핵심광물 독점에 대한 대응 조치 촉구 : 핵심광물 부문 비시장 정책 및 관행 관련 보고서(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Critical Minerals Sector) 발간
	1.14.	[광물] 미국-캐나다, 관세 위협 속 광물 파트너십 모색: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 美와 갈륨·게르마늄·우라늄 등 광물 협력 가능성 언급
	1.15.	[바이오] 상무부, 첨단생명공학 장비 수출통제 규정 발표: 유세포 분석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수출시 허가 필요
	1.15.	[반도체] 산업안보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실사 의무 강화 조치 발표 : 수출통제 우회 방지를 위해 파운드리 업체에 검증 책임 부과
	1.16.	[관세] 민주당,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권한 제한 법안 지지
	1.17.	[틱톡] 연방대법원, 틱톡(TikTok) 강제매각법* 합헌 판결 *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1.17.	[경제] 헤리티지재단, '2025년과 그 이후 한미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의제'* 보고서 발간 * An Agenda for the U.S.-South Korea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in 2025 and Beyond	

국가	일자	내용
미국	1.20.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78개 행정명령 철회: 산업·통상·에너지 관련 조치 포함(EO 14008, EO 14037, EO 14052, EO 14057 등)
	1.20.	[무역]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메모랜덤 서명 : ▲무역적자 검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 설립 검토 ▲USMCA 검토 ▲교역상대국 환율·통화 정책 검토 등 포함
	1.20.	[기후] 트럼프 대통령, ▲파리 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 ▲유엔기후변화협약 下 재정적 기여 중단 행정명령 서명
	1.20.	[틱톡] 트럼프 대통령, 틱톡(TikTok) 강제매각법 집행 중단 행정명령 서명
	1.20.	[관세] 트럼프 대통령, 2.1일자로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검토 언급 :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불법 월경 및 펜타닐 유입 문제 재차 지적
	1.21.	[관세] 하원 세입위 위원장 J. Smith 역외관세대응 법안* 발의 * To Provide an 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the Extraterritorial Taxes and Discriminatory Taxes of Foreign Countries
	1.21.	[AI] 트럼프 대통령, AI 인프라 투자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 발표 *오픈AI · 소프트뱅크 · 오라클 합작기업
	1.21.	[공급망] 쿼드(QUAD) 미 · 일 · 호 · 인 외무장관 공동성명 발표 : 역내 증대되는 위협에 맞서 해양, 경제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촉진을 확인
	1.23.	[AI] 백악관,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 : (주요 내용)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 폐기 ▲행정명령 서명 180일 이내 새로운 AI 행동계획 수립 지시 *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1.23.	[가상화폐] 백악관, 美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발표 : (주요 내용)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작업반** 설립 등 *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전략적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분(strategic national digital assets stockpile) 신설 평가 등 임무 수행
	1.24.	[관세] 하원 공화당 의원들,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발의 : (주요 내용) 무역상대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도 동일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
	1.28.	[관세] 그렉 머피 하원의원, 「중국의 미소기준 남용 종식법(End China’s De Minimis Abuse Act)」 발의
	1.30.	[관세]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보편관세 지지
	1.30.	[반도체] 정부, 엔비디아 H20 칩 등 중국 수출 규제 강화 검토
	1.31.	[AI] 백악관, 中 딥시크 전면조사 착수: 오픈AI 및 MS 데이터 무단 수집 의혹
	1.31.	[반도체] 상무부, 中 딥시크에 수출통제 AI 반도체 사용여부 조사 착수
1.31.	[관세] 상원 민주당 쿤스 의원과 케인 의원,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부과 제한 법안* 발의 *Stopping Tariffs on Allies and Bolstering Legislative Exercise of Trade Policy act(STABLE Act)	

국가	일자	내용
미국	2.1.	[관세]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추가 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 서명 : ▲캐나다·멕시코 25%(단, 캐나다産의 경우 에너지 10%) ▲중국 10% 관세 부과
	2.3.	[관세] 트럼프 대통령,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및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각각 통화 후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발표 / 중국과는 24시간 이내 협상 가능성 시사
	2.4.	[관세] 對中 추가 관세 10% 발효
	2.5.	[무역] 상무부 경제분석국, 2024년 무역통계 발표 : 2024년 미국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17% 증가(1,335억 달러)
일본	1.5.	[자동차] 닛산-혼다 합병 위기 전망: 닛산자동차 혼다와의 합병 협의 백지화 방침
	1.10.	[대러제재] 경산성, 對러 추가제재로 외환법 근거 수출무역관리령 등 개정 조치 승인
	1.15.	[반도체] 경산성, 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 예산안에 1,600억엔 계상
	1.20.	[전기차] 도요타, 中 상하이에 렉서스 EV 신공장 건설 방침(2027년 가동 목표)
	1.23.	[외국인투자] 해외 기업의 對日 투자시 사전 심사제도 강화 예정: 중국 기업 등 '특정 외국 투자' 해당 기업 대상 사전 심사제도 구축
	1.24.	[자동차] 닛산, 멕시코 소재 메르세데스-벤츠 합작 공장 가솔린 자동차 생산 중단 계획 (~2025년 말) 발표
	1.31.	[사이버안보]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운용 담당 특명담당대신 신설 방침
EU	1.15.	[해외투자] 집행위 통상총국, 해외투자검토 권고안 발표 : ▲(검토 분야) 반도체·인공지능 및 양자 관련 기술 ▲(검토 내용) 해외투자 관련 기본정보 수집 및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수행 등
	1.21.	[환경] 집행위, 소비자제품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추진: 2025년 중 관련 법안 제안 예정
	1.23.	[탄소중립] 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2024년 6월 발효) 관련 3건의 이행법안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개시
	1.29.	[정책] 집행위,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발표 : (3대 핵심축) ▲미·중과의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 ▲대외의존도 감축 및 경제 안보 강화
	2.4.	[AI] 집행위, AI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고용주의 AI 활용한 직원 감정 추적 및 민간·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의 신용도·평판 점수화 등을 금지하는 내용
2.4.	[관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025 EU 대사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힘든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	
2.5.	[관세] 집행위, 미국의 對EU 관세에 대응(美 빅테크 타격) 방안으로 통상위협대응조치 (Anti Coercion Instrument, ACI) 발동 여부 검토	
캐나다	2.1.	[관세] 트뤼도 총리, 대미 보복관세 조치 발표: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2.2.	[관세] 정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관련 WTO 제소 결정 / 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추진키로 결정

국가	일자	내용
대만	1.21.	[지진] 중남부지역(자이현) 6.4 규모 지진 발생: 반도체·패널 공장 직원 대피 및 생산 중단 등 일부 피해
네덜란드	1.15.	[수출통제]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수출통제 규정 개정 발표 : ▲특정 증착 장비 ▲계측 및 검사 장비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기술 등 통제 대상 추가
	1.29.	[반도체] 경제부, 반도체 산업 민관협의체(Semicon Board NL) 출범 : (역할) 2035년 반도체 산업 주요 어젠다* 선정 및 과업·목표·투자 등 논의 * Semicon Sector Agenda 2035
독일	1.15.	[경제] 2024년 독일 경제 또다시 역성장: 전년 GDP 대비 0.2% 감소하여 2년 연속 경기 후퇴 발생
	1.29.	[자동차] 아우디·포르쉐 등 폭스바겐 자회사, 美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대응 차원에서 미국 내 생산 가능성 검토
	1.29.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실행계획(E-Commerce Aktionsplan) 채택: EU와 제3국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및 거래자에 대한 법적 집행 강화
멕시코	1.3.	[관세] 테무·쉬인·아마존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FTA 체결국產 택배 수입에 대해 19% 관세 부과
	1.13.	[전기차]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경제발전 종합계획(Plan Mexico)을 통한 멕시코 독자 기술 전기차 개발 선언
	1.21.	[관세] 삼성전자·LG전자, 멕시코 공장 이전 검토
	2.1.	[리튬] 리튬 자원 국유화 정책 동향: 리튬 탐사, 채굴 관련 전담 공기업 설립 및 운영(2022년), 법안 개정을 통한 리튬 개발 관련 양허(concesiones) 제한(2024년 10월) 등 민간기업 리튬 사업 제한 정책 추진 중
칠레	1.7.	[구리] 환경평가원(SEA), 5억불 규모 구리 광산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 채택
	1.16.	[인프라] 현대건설 시공 중인 차카오(Chacao) 교량 준공 연기(2028년 예정)
	1.17.	[리튬] 국립 리튬·염호 연구소 설립 : (연구 분야) ▲직접리튬추출 기술 개발 ▲리튬 배터리 신기술 개발 ▲리튬 생산 관련 물질의 재사용 방안 모색 ▲염호 내 생물 다양성 보존 등
	1.17.	[광물] 칠레-사우디, 구리·리튬 공동 투자 논의 착수
인도	1.10.	[배터리] 정부, 배터리 부품 제조 지원 인센티브 검토
	1.20.	[전기차] 정부, 고급 전기차 생태계 조성 본격 착수
	1.23.	[수출] 스마트폰, 인도 2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
	1.27.	[철강] 정부, 미·중 무역 갈등 속 철강 덤핑 대응 강화 검토 중
인도네시아	1.13.	[니켈] 정부, 2025년 니켈 감산 계획 공개
	1.20.	[탄소] 인도네시아 국제 탄소거래시장 공식 출범
사우디 아라비아	1.15.	[광물] 1,000억 달러 규모 광물 투자 프로젝트 발표 : 리튬·구리·니켈 등 핵심광물 및 희토류 원소 탐사 확대 계획 논의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미국	1.16.	[석유] 바이든 행정부, 알래스카 석유 시추 제한 최종 확정: 알래스카 북쪽 경사(North Slope) 지역 130만 에이커(acre)에 신규 보호조치 발표
	1.20.	[에너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Unleashing American Energy) 발표
	1.20.	[에너지] 트럼프 대통령,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행정명령 ▲알래스카 천연자원 잠재력 활용 행정명령 ▲풍력발전 관련 연방정부 임대·허가 관행 재검토 메모랜덤 등 발표
러시아	1.15.	[에너지]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베트남 방문 계기로 베트남에 원유·LNG를 공급 및 재생에너지 등 신규 전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양국 합의
일본	2.2.	[가스] 정부, 440억 미불 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 동참 방안 검토
독일	1.19.	[발전] 메르츠 기민당 총리 후보, 독일에 가스화력발전소 50개 건설 공약
핀란드	1.14.	[원자력] 기후환경장관, 핀란드 내 신규원전 건설 및 재정지원 필요성 확인
루마니아	1.14.	[LNG] 에너지부, 벨기에의 '러시아산 LNG 수입 금지 제안' 지지
칠레	1.7.	[수소] 칠레의 Copec社, 칠레 최초 대형수소트럭 충전소 구축 프로젝트 참여 발표
호주	1.10.	[가스] 연방산업과학자원부(DISR), 2025년 2분기 가스수출제한조치(ADGSM) 미발동 발표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